

與 “호시우행”...野 “소통·통합 정치 복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여야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23일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내며 고인을 기렸다. 아울러 야당에선 정부여당이 '노무현 정신'을 잇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님이 꿈꾸셨던, 반칙과 특권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은 우리 모두의 이상이 되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손잡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그러셨듯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처럼 예리한 시선을 가지고 소와 같이 우직한 발걸음으로 전진하겠다”며 “국민이 앞서가면 걸음을 빨리 하고 국민이 늦추면 끈기 있게 소통할 것이다. 민심에 귀 기울이고 단호하게 혁신하는 유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이란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며 “원칙을 지켜나가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돌아와서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내년) 13주기 때는 제4기 민주주의 정부를

민주 “4기 민주정부 수립 후 文대통령과 봉하행”
국힘 “소통·통합 아쉬운 요즘...盧이정표 삼아야”
정의 “盧정신, 소상공인 보호·부동산 불평등 타파”



권양숙 여사, 김부겸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영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서 참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수립해서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마무리하실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이곳을 찾게 되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를 맞아,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복원하는 시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은 살아생전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주셨다”면서도 “그러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구호는 허공 속 메아리가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일자리 등 산적한 민생현안과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금처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벌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통합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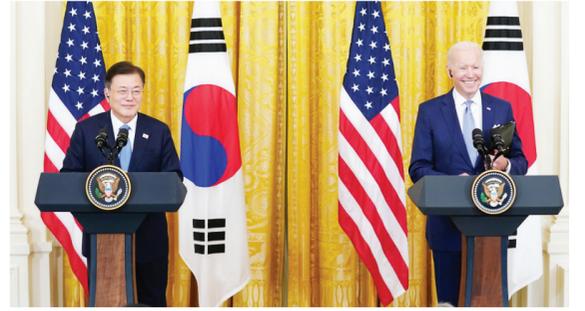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도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좀더 개방적인, 토론 소통과 진영논리를 넘어선 통합의 정신이 아쉬운 요즘 시점에 노 대통령이 남기신 그 뜻을 우리 이정표로 삼아갔으면 좋겠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차별과 불평등,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역주의와 부동산 불평등 타파에 앞장서고 소상공인 보호, 친환경 가치를 실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린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집권여당이 코로나19 실보상법 소급적용에 의지가 없다는 점은 큰 비극”이라며 “집권여당은 누구보다 재래시장 활성화 등 소상공인 정책에 앞장섰던 노무현 정신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 완화의 물꼬를 트고 있는 집권여당에는 심각한 문제 의식을 느낀다”며 “노 대통령은 누구보다 보유세에 대한 의지가 강한 대통령이었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요시했지만 결국 투기와의 전쟁에서 실패했던 참여정부 시절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그 어느 때보다 독선·위선과 불공정이 가득한 시대인 지금 선동적이지 않고 위선과도 거리가 멀었던 진솔한 노 전 대통령이 오늘따라 무척 그리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文, 3박5일 방미 마치고 귀국 백신·반도체·원전 등 ‘성과’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또 안보 중심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백신과 반도체 등 기술·경제협력은 물론 기후변화에 이르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했다.

●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백신 생산 허브 도약 발판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과학자, 전문가,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하기로 했다.

미국의 백신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해, 한국을 백신생산 허브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질적인 성과도 나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는 2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에서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외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 원액을 국내에서 완제 충전해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노바백스, SK바이오사이언스, 보건의료부는 차세대 백신 등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3건의 한미 기업, 정부 간 MOU 체결이 성사됐다.

●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 공급망 확보 협력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에 대한 공급망 회복력 향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백악관은 첨단 제조 및 공급망과 관련한 협력을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한미 공급망 태스크포스(TF) 구축 등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 상호 투자도 이뤄졌다. 삼성전자·SK·LG·현대차는 21일 오전 미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4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 한미는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 판문점 선언 재확인 성과...키드·대만 언급은 부담

전문 외교 분야에서는 한미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도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 놓고 해결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점도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문 대통령에게는 긍정적인 성과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군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42년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뉴스

국민의힘 대표 지지도 이준석 30% 돌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30%대를 기록했다.

한길리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당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22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은 30.1%였다. 나경원 전

의원(17.4%)과 12.7%포인트, 주호영 전 원내대표(9.3%)와 20.8%포인트 차로 선두다.

앞서 같은 기관이 8~11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나 전 의원이 15.9%, 이 전 최고위원이 13.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남성(35.7%), 30대(36.2%)와 40대(31.9%), 강원권(38.7%)과 제주권(37.3%), 중도성향(36.0%) 등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뉴스

박용진 “軍 부실급식 ‘험값’ 징병제 탓”

“국가 안보 위해 병역 제도 개선해야” 모병제 주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군 장병 부실급식 논란과 관련,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청년들을 험값에 강제로 징집해 쓰는 현행 징병제도에서 기인한다”면서 모병제를 주장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치는 청년 장병들을 이렇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병역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제가 제시한 ‘모병제도 정예강군, 남녀평등복무제도 강력한 예비군제 구축’ 정

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민주당의 예비 경선 과정에서부터 병역제도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정책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부실 군대 논란의 해법은 내부 고발을 못하게 막거나 급식 책임을 외주업체에 맡겨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엉뚱한 방식이 될 수는 없다”며 “근본적으로 우리 병역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제가 앞장서겠다. 늘 그랬듯이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논란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